

전주시의회 의원 5분 발언 잇따라

최지은 의원, 수요응답형(DRT) ‘전주형 스마트 마을버스’ 도입 제안

최한별 의원, 광역 공공배달앱 전환·온누리상품권 가맹 확대 촉구

신유정 의원, 제3금융중심지 지정 위한 전주시 선제적 행정 대응 촉구

채영병 의원, 고금리 대출 부담 완화 위한 ‘전주형 포용금융’ 제안

전주시의회 제43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4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최지은 의원(발복, 송천2, 조촌, 여의동)은 시민 이동 수요에 맞춘 맞춤형 교통서비스인 ‘전주형 스마트 마을버스’ 도입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마을버스 이용객은 늘고 있으나 고정된 노선과 시간표 중심 운영으로 혼잡과 공차 운행이 반복되는 등 운영 효율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용 데이터 기반 노선 운영 최적화 △DRT 시범사업 추진 △혼잡 노선 탄력 운영 △마을버스·모심택시 통합 운영체계 구축을 통한 ‘전주형 스마트 마을버스’ 도입을 제안했다.

최한별 의원(송천1·3동)은 위기에 처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배달앱 개편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대폭 확대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민간 배달 플랫폼의 독과점으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전주맛배달’은 막대한 예산 투입 대비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전주맛배달’ 폐지와 ‘전북형 광역 공공배달앱’ 확대·전환을 제안했다.



최지은 의원



최한별 의원



신유정 의원



채영병 의원

또 “개별 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과정에서 장벽을 느끼고 있다”며 골목형 상점가 등록 지원 체계 마련 등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신유정 의원(혁신동)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전주시의 선제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금융중심지 지정은 도뿐만 아니라 전주시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업무공간, 정주환경, 교통, 인재양성 등 금융도시로서의 기반을 지정 이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타운 조성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인허가, 도시계획 등 전주시의 행정역량을 적극 활용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정착하고 기업이 성장하는 금융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영병 의원(효자2·3·4동)은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고금리 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주형 포용금융 정책’ 도입을 제안했다.

채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상당수가 임대보증금 마련을 위해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어 이자 부담이 체납과 주거 불안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보증금과 성실 납부 이력을 활용해 고금리 대출을 제1금융권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협약형 금융 상품 생성이 필요하다”며 전주시가 LH, 주택관리공단, 금융기관 간 협력을 주도해 전주형 포용금융 모델 구축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

일부 경로당 보조금 부적정 사용 논란

“투명한 운영·관리 강화 필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어르신 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경로당 운영보조금이 일부 경로당에서 목적 외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주시의 한 아파트 경로당에서는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아파트 전 노인회장을 노인복지법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상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아파트 경로당에 지원되는 난방비 및 운영비 집행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는 운영비로 지급된 보조금을 식재료 구입이나 회원 간 물품 분배 등에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관련 사실을 본지에 제보한 한 노인은 “연말에 남은 운영비를 반납하지 않기 위해 미역, 닭, 계란 등을 구입해 경로당 회원들에게 나눠 준 사례가 있었다”며 “보조금은 반드시 정해진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노인복지법과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환수 조치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

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정기 감사와 회계 점검을 통해 부적정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사실을 제보한 한 노인은 “경로당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지원금이 실제 복지 혜택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되지 않으면 가장 필요한 분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주 지역에는 본지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650여 개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비와 난방비 등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전문가들은 경로당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회계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용내역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집행과 관련한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경로당의 보조금 사용과 관련하여 한 도민은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인 만큼 단 한 톨이라도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한다”며 “관련 담당 공무원의 철저한 지도·감독과 함께 경로당 운영진의 책임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경로당의 부적정한 운영비 집행 논란은 특정 시설의 문제를 넘어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경로당 보조금 관리 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주고 있다.

또한 제보자는 전주시 경로당 회장 교육에도 법과 원칙에 따른 교육생 선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성이 있는 선출직 회장임에도 사퇴 후 이를 철회하여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되어 교육에 임하려고 하자 전주시 노인회 측에서 임의로 반대하는 측의 말만 듣고 교육 자격을 박탈하는 결정하는 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관계자에게 확인한 바, “교육 대상자인 해당 경로당 회장이 사퇴하였다고 하여 다음 기회에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미뤄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경로당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이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시스템을 마련해 어르신 복지 예산이 본래 취지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나뉘어 늘어가고 있다.

경로당의 투명한 운영으로 어르신이 존중받는 경로당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이 요구된다.

/이만호 기자

제2차 공공기관 ‘전북 우선·전주 중심 배치’ 촉구

전주시의회, 장병익 의원 대표발의 결의안 채택

전주시의회가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결정을 앞두고 전북특별자치도의 ‘3중 소외’를 극복하고 자립적 성장 체계 구축하기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전북 우선·전주 중심 배치’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전주시의회는 23일 열린 제43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장병익 의원(중앙, 풍남, 완산, 중화산1·2동)이 대표발의한 ‘지방수도성장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전북 우선·전주 중심 배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장병익 의원은 장 의원은 “전북혁신도시에는 농생명 연구의 중심인 농촌진흥청과 세계적 규모의 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이 자리하고 있다”며 “이 기반에 연구·생산·유통·금융·투자 기능을 결합하고, 한국산업은행과 농협중앙회 등 주요 금융 공공기관과 한국은행의 관련 기능까지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농생명 연구가 산

업으로, 산업이 투자와 기업,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며 “제3금융중심지 실현은 물론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전북 우선·전주 중심 배치’ 반영 △기능적 집적·전략적 집중 원칙에 따른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및 농생명·금융·자산운용 등 핵심 연계 기관 전북혁신도시 배치 △전북혁신도시를 공공기관 이전의 기본 거점으로, 이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유류 공공자산 활용의 제도적·정책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지속

전주시, 1060건 지원…경제적 불안 완화·적기 치료 효과 등 확인

전주시는 상병수당 시범 사업의 운영 성과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신청 안내와 지역 의료기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원 대상자가 제도를 몰라 신청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보건복지부의 성과평가에서도 상병수당의 실

질적인 정책 효과가 확인됐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성과 평가에 따르면 상병수당 수급자의 경제적 불안이 줄고, 제때 치료받은 비율은 10.1%포인트 증가한 반면 ‘하루 기간 중 일한 날’의 비율은 23.3%포인트 감소했다. 이에 정부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각계 의견을 수렴해 본사업 추진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전주시의 경우 지난 2024년 7월 상병수당 3단계 시범 사업이 시행된 이후 지난달 25일까지 총 1060건, 12억4030만 원의 상병수당을 지급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쉬어야 하는 시민의 치료와 생계 안정을 지원했다.

이는 3단계 시범사업 참여 지역인 전주·원주·충주·홍성의 전체 지급건수 2558건 중 41.4% 전체 지급액 27억7213만 원 중 44.7%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한 전주시의 건당 평균 지급額は 23.2일, 평균 지급액은 약 117만 원으로 집계돼 지급건수와 지급액 모두 참여 지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기간에 소득을 지원해 치료와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5월부터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했으며, 3단계 지역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는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반영해 1일 4만9640원부터 8만8100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또, 실시간 소득 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는 1일 4만19540원을 정액 지급하며, 최대 보장 기간은 150일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린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전인자였다.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들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공각



내아

전주매일 캠페인

러싼 임차인과 사업자 간 분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의회는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우선매각·분양전환 시 매각가격 산정기준 마련 및 매각가격 등 주요 절차 사전 공개로 임차인 알 권리 보장 △임차인대표회의의 협의권 확대 및 장기 거주 임차인 권리 보호 제도 마련 △주택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권한 보완 및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 확대 등 효과적인 분쟁조정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